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석재은

(한림대학교)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경제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복지국가 지속가능지수, 퍼지셋 이상형 분석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040).

■ 투고일: 2014.10.31 ■ 수정일: 2014.12.26 ■ 게재확정일: 2014.12.27

I. 서론

현대 복지국가는 인구고령화, 경제의 세계화, 후기산업사회, 가족의 변화, 사회 양극화 등 거대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20세기 노동중심의 산업구조로부터 21세기 후기산업사회는 정보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근로자의 노동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생애사이클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은 산업사회와 현대 복지국가가 구축한 연금제도 등 사회적 부양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왔다. 또한 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의 증가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던 돌봄의 위기를 가져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Jessop, 1994; Esping-Anderson, 1999; 2002; Pierson, 2001; Taylor-Gooby, 2004).

특히 후발국인 한국의 경우, 복지수요 증가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고도성장기에 복지지출 증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온 선진국과 달리, 복지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자원의 크기가 제약되는 저성장 상황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연금, 노인의료, 장기요양 등 노인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빈부격차 및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가족 및 여성의 역할변화에 따른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인구의 감소와 생산성의 정체에 따른 국가재정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가용자원의 규모는 오히려 제약되는 암울한 모순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래사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김용하 외, 2011b; 한국경제연구원, 2011). 여기에 한국사회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통일'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다면 모순적인 딜레마적 상황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아직 GDP 대비 9%로 OECD 국가들 평균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향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용하 외, 2011b; 한국경제연구원, 2011). 따라서 미래 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질적인 증가가 필요한데,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부

담를 인상하거나 그 부담을 미래부담으로 전가하는 국가채무를 증가하는 선택만이 가능하다. 경제성장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물의 인상도 제한적이고, 국가채무의 증가는 유럽의 경제위기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김용하 외, 2011b; 김연명, 2013). 일각에서는 이들 국가의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복지지출에 혐의를 두고,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를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기도 하였다(한국경제연구원, 2011). 또한, 김연명(2013)은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남부유럽형 복지체제로의 수렴을 경고하였다. 한국과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의 분절화와 계층화, 그리고 돌봄에 있어서 가족책임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한국이 복지국가 초기단계를 지나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복지수혜의 계층별 차별화와 대규모의 사각지대, 그리고 가족의 과중한 복지 부담을 특징으로 하는 남부유럽형 복지체제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김연명, 2013).

이와 같이 저성장 고령사회로의 전환으로 가용자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증폭하는 사회 복지 욕구를 해결하면서 남유럽형 복지모델의 전철을 밟지 않는, 단 하나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원칙이 있다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¹⁾이라 할 수 있다(Esping-Anderson, 1999, 2002; Glennerster, 2008; Clasen, 2009; 김용하 외, 2011a, 2011b; 한국경제연구원, 2011; 신동면 · 최영준, 2012; Morel et al., 2012). 지속가능성은 공동체 모두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사회복지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주로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초점이 두어져왔다(OECD, 2005; EU, 2010; Meire & Werding, 2010).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과중 속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 외에도 건강보장, 장기요양제도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논의가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에스핑 앤더

1) 자세한 개념정의는 2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스(1999, 2002)은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 바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배분 규칙의 재설정 등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 특히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를 통해 출산율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델 등(2012)도 에스핑 앤더슨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다차원적인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모델로서 사회투자복지국가(social invest welfare state) 모델을 주장하였다(Esping-Anderson, 1999, 2002; Morel et al., 2012). 김용하 외(2011a, 2011b)에서도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재정의하고,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특성을 분류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한다.

II.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정의와 평가

1. 선행연구 검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持續可能性)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라는 의미로, ‘미래 유지가능성’으로 요약된다”(환경 경제용어사전, 2014). 지속가능성은 1972년 유럽의 경제인과 과학자가 중심이 된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라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이후 인간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정의 중 하나는 브룬트란트 위원회로 잘 알려진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정리한 정의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희생하게 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이다”(하수정, 2012).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는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며, 개개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의 기회를 갖는 사회이다.

그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 담론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형성되어 왔다. 지속가능성 논의가 연금제도, 의료보장, 장기요양제도 등 어떤 하나의 제도나 하나의 정책영역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논의의 초점도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급여 대비 부담을 평가하는 재정부담의 지속가능성에 두어져 왔다.

그러나 Esping-Andersen(1999, 2002)이 지적하였듯이,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출산율의 유지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였다. 동시에 세대간 정의에 입각하여 근로인구와 노령인구의 분배를 조정하는 연금제도의 개혁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식기반 정보기술사회와 서비스경제로 접어들면서 고용이 축소되고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회투자를 통해 일자리 질을 유지하며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용하 외(2011a; 2011b)도 재정적 입장에서 단순하게 논의되던 지속가능성 개념을 벗어나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으로 다차원적 인식하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대된 정의를 시도하였다(김용하 외, 2011a, 2011b). 김용하 외(2011a)는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차원의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였다(KIHASA-Chosun Welfare Index 2011: KCWI 2011, 표 1 참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5대 부문(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을 선정하고, 부문별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총 27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ECD 국가별 지속가능한 복지 지수를 산출하였다.²⁾

²⁾ 지속가능 복지지수(KCWI 20011)순위 산정은 각 지표를 표준화한 다음,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별지표의 평균가중치를 산정.

표 1. KIHASA-Chosun 복지지수(KCWI) 2011

부문지표	개별지표
경제활력(A)	1) 고용률 2) 실질경제성장률 3) 생산성증가율 4) 물가상승률 5) 1인당 GDP
재정지속(B)	1) 국가부채비율 2) 재정적자율 3) 조세부담률 4) 사회보험부담률
복지수요(C)	1) 노인인구비율 2) 지니계수 3) 빈곤율 4) 실업률 5) 장애인비율 6) 산업재해발생률
복지충족(D)	1)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2) 건강보장률 3) 고용보장률 4) 아동 및 보육지원율 5) 장애급여 보장률 6) 국가투명도 7)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국민행복(E)	1) 자살률 2) 출산율 3) 평균수명 4) 주관적 행복도 5) 여가시간
복지지수	$A(20\%) + B(20\%) + C(20\%) + D(20\%) + E(20\%)$

자료: 김용하 외(2011a). pp.31-32

KIHASA-Chosun 지속가능 복지지수(KCWI 2011)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5가지 영역의 다차원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각각의 다섯 개 차원마다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각 영역별로 20%를 할당하여 표준화한 다음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지수를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지수를 측정하는 작업은 처음 이루어진 시도이며,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지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영역의 지속가능성 지수값들도 산출함으로써, 국가가 종합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영역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기여에도 불구하고, KCWI 2011 작업은 지표구성의 적절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동일한 상황을 각각 다른 시점에서 평가하는 욕구(수요)지표, 투입지표, 성과지표 등을 함께 혼용하여 평가한 것이다. 예컨대 지속가능성의 성과를 보여주는 측면(경제활력지표, 재정지속지표, 국민행복지표)의 지표들과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관련이 있는 투입 측면의 복지충족지표를 동일한 차원에서 혼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중복적 평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욕구의 규모를

보여주는 복지수요지표 역시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지속가능성의 성과에 이미 영향을 미친 인과적 요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지성과지표와 동일한 차원에서 합산하여 지속가능성 지수를 내기에는 중복적으로 감안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KCWI 2011이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보다 개념적인 차원에서 정의하기 보다는 경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는 데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측정 이전에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정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본 연구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정의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선행연구의 경험에 바탕하여 정의를 내리기 위해 몇가지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여러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결합되어 지속가능성을 구성한다. 즉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속성의 결합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에는 그 개념 속에 미래적 시점의 상태를 포함하지만, 국가 비교의 차원에서 각 국가의 상이한 조건들을 일일이 고려하여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가능성 지수는 현시점에서 측정한다. 다만 지속가능성의 미래적 개념은 주기적인 반복적 측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변화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답을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은 현재 시점의 성과로 측정한다. 지속가능 지수를 산출하는 데, 지속가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포함되지 않도록 현재시점의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넷째,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차원 영역의 지표들은 가능한 간명한 대표지표들로 구성한다.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는 수준에서 지표수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다섯째, 각 영역별 대표지표들은 동등한 지위를 가질만한 지표로 구성하여 가중치를 균등하게 부여한다. 여섯째, 지속가능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 간 가중치도 동등하게 부여한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정의내리기 위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생산부문, 국가-재정부문, 가정-복지부문에
서 각각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호간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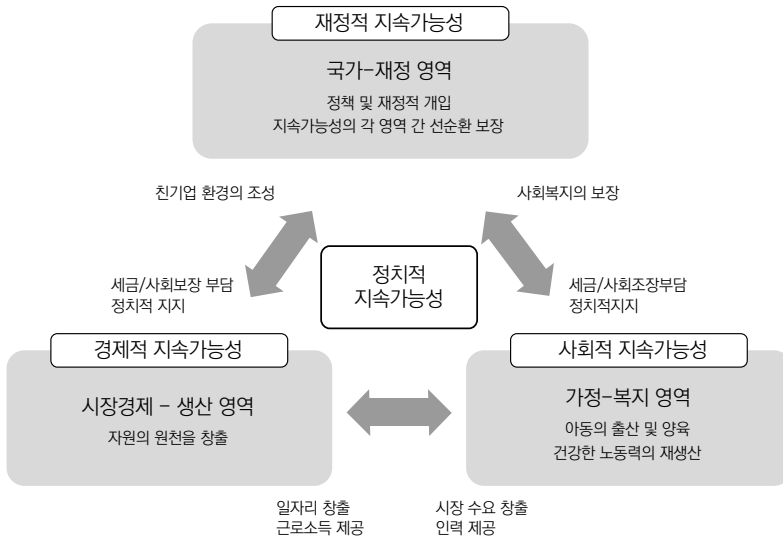
첫째, 시장경제의 생산영역에서는 가치생산과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의 재정영역과 가정의 소비영역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자원분배의 원천이 만들어진다. 생산부문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부문에 근로소득을 제공하며, 국가-재정 부문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따라서 경제 영역의 작동 성과에 따라 분배자원의 규모가 결정된다. 세계화된 경제하에서는 경제 영역의 원활한 작동(예컨대, 총수출액, 총이익)과 국내 총생산 규모 및 고용률 등의 성과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국민에게 배분될 수 있는 경제자원을 중심으로 경제-생산영역의 지속가능성이 평가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생산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태는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져 1인당 GDP가 높고, 고용률이 높으며,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재정영역에서는 국가가 시장경제-생산 부문과 가정-재생산 부문이 각각의 영역에서 잘 작동할 뿐 아니라 영역들 상호 간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정책적, 재정적 개입을 수행한다. 국가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곳에 개입하고, 여러 사회보장제도와 가족정책, 노동정책 등을 통해 개인의 복지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가의 재정지출에 맞는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태는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국가재정 적자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부담 수준이 낮은 경우 객관적인 부담여력이 더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셋째, 가정 복지영역은 출산, 양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며, 생활공동체로서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시장경제-생산부문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가계소비를 통해 시장경제-생산부문에 활력을 제공하고, 국가-재정부문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가정 영역은 경제영역, 국가영역에서 이루어진 1차, 2차 및 3차 자원배분의 최종 귀착지이며, 개개인의 복지가 구현되는 장이다. 따라서 가계-재생산 영역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태는 출산율이 높아 사회구성원의 원활한 재생산이 이루어지며, 객관적 삶의 질을 반영하는 평균수명이 높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빈곤율이 낮고, 빈부격차가 작아 소득불평등도가 낮고, 개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1. 복지국가의 다차원적 지속가능성과 선순환



시장경제-생산, 국가-재정, 가정-복지 영역의 세 영역은 상호 간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만일 어떤 한 영역이라도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 영역 간 선순환 고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전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정책, 규제, 사회보장 등을 통해 각 영역의 원활한 작동과 세 영역 간 선순환을 보장하는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국민의 정치적 지지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국가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공학적 관점에서 가장 좋은 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의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실행하기 어렵다. 홍경준(2011)은 좋은 정치제도란 사회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협력을 이룬 다양한 차원의 지속가능성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배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은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용하 외, 2011b).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지속가능성은 제외하고, 경제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세가지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고, 측정한다.

3.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측정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KCWI 2011 지표를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재정리하였다. 지표구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여야 하며, 둘째, 투입(노력) 지표가 아니라 성과(결과)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이 KCWI 2011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인데,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려면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투입(노력) 지표는 지속가능성 성과가 좋은 경우 어떤 투입(노력)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가 라는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가능한 대표적인 핵심지표로 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간명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시장경제-생산부문 지표는 고용률, 1인당 GDP, 실질 GDP성장률로 설정하였다. KCWI 2011와 비교하여 간명성 차원에서 생산성증가율과 물가상승율을 생략하였다. 국가-재정부문에서는 국가재정적자율, 국가부채율로 구성하였다. KCWI 2011와 비교하여 국민부담에 해당하는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은 삭제하였다. 국민부담률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복지지출이 높으면 국민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정-복지 부문에서는 사회적 재생산의 원활성에 기여하는 복지 성과가 반영된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아이를 낳아 키울만해야 출산율이 높아지며, 객관적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소득이 적절히 분배되어야 빈곤율이 낮아지고, 소득불평등이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표 2. 지속가능 복지국가지수(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SWSI)

지표		출처	가중치
시장경제-생산부문	고용률	OECD Factbook 2013	33.3%
	1인당 GDP	OECD Factbook 2013	33.3%
	실질 GDP 성장률	OECD Factbook 2013	33.3%
국가-재정부문	국가재정적자율	OECD Factbook 2013	50%
	국가부채율	OECD Factbook 2013	50%
가정-복지 부문	합계출산율	OECD Factbook 2013	20%
	평균수명	World Health Statistics 2013	20%
	상대적빈곤율(50%)	Growing Unequal 2008, OECD	20%
	Gini 계수	Growing Unequal 2008, OECD	20%
	삶의 만족도	Society at a Glance 2013	20%

서로 상이한 단위가 다르고 값의 분포도 상이한 지표들의 표준화 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표준화 방법

구분	수식	해당지표
순기능	$Z_{ij} = \frac{X_i - \min(X_i)}{\max(X_i) - \min(X_i)}$ i: 지표 j: 국가 max(Xi): 해당 지표 중 최대값 min(Xi): 해당 지표 중 최소값	고용률, 1인당 GDP, 실질 GDP 성장률 합계출산율, 평균수명, 삶의 만족도
역기능	$Z_{ij} = \frac{\max(X_i) - X_i}{\max(X_i) - \min(X_i)}$	국가채무, 국가재정수지, 상대적빈곤율(50%), Gini 계수

자료: 김용하 외(2011a)

4. OECD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지수를 평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2013년 기준으로 세 영역의 지속가능성 지수를 합산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지수는 스위스가 가장 높았다. 스위스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지속가능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지수는 분석대상 OECD 27개 국가들 중 17위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표 4. 복지국가 지속가능지수 평가: 2013

순위	국가	총합	시장경제 -생산부문	국가-재정부문	가정-복지부문
1	Switzerland	2.064	0.739	0.768	0.557
2	Norway	2.056	0.665	0.713	0.677
3	Sweden	2.020	0.708	0.647	0.664
4	Denmark	1.884	0.585	0.617	0.683
5	Luxembourg	1.860	0.729	0.602	0.529
6	Netherlands	1.787	0.610	0.569	0.608
7	Finland	1.741	0.541	0.561	0.639
8	New Zealand	1.699	0.479	0.644	0.575
9	Austria	1.672	0.575	0.543	0.554
10	Germany	1.635	0.612	0.560	0.463
11	Australia	1.623	0.602	0.538	0.484
12	Belgium	1.541	0.439	0.489	0.612
13	Canada	1.513	0.598	0.394	0.520
14	France	1.479	0.426	0.435	0.619
15	United Kingdom	1.458	0.522	0.442	0.494
16	Czech Republic	1.453	0.420	0.521	0.511
17	Korea	1.430	0.520	0.618	0.292
18	Iceland	1.400	0.476	0.274	0.650
19	Ireland	1.376	0.350	0.477	0.549
20	United States	1.300	0.545	0.408	0.347
21	Japan	1.237	0.591	0.271	0.374
22	Spain	1.187	0.295	0.466	0.425
23	Poland	1.144	0.353	0.489	0.302
24	Hungary	1.074	0.232	0.518	0.324
25	Portugal	1.028	0.413	0.334	0.280
26	Italy	1.000	0.321	0.348	0.331
27	Greece	0.839	0.149	0.254	0.436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부문별 순위를 보면(표 5), 스위스는 시장경제-생산영역 및 국가-재정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가정-복지 부문에서는 다소 낮은 10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종합적인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각각 2위, 3위, 4위를 차지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시장-경제부문에서 각각 4위, 3위, 2위, 국가-재정 부문에서 각각 2위, 3위, 6위, 가정-복지 부문에서 각각 2위, 3위, 1위 등 세 부문에서 모두 고르게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각각 27위, 26위, 25위, 22위 등 최하위권을 차지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생산 부문에서는 각각 27위, 24위, 21위, 25위, 국가-재정 부문에서는 각각 27위, 23위, 24위, 18위, 가정-복지 부문에서는 각각 19위, 23위, 27위, 20위 등 세 부문에서 모두 최하위권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 복지국가 지속가능 부문별 국가 순위: 2013

순위	지속가능성	시장경제-생산부문	국가-재정 부문	가정-복지 부문
1	Switzerland	Switzerland	Switzerland	Denmark
2	Norway	Luxembourg	Norway	Norway
3	Sweden	Sweden	Sweden	Sweden
4	Denmark	Norway	New Zealand	Iceland
5	Luxembourg	Germany	Korea	Finland
6	Netherlands	Netherlands	Denmark	France
7	Finland	Australia	Luxembourg	Belgium
8	New Zealand	Canada	Netherlands	Netherlands
9	Austria	Japan	Finland	New Zealand
10	Germany	Denmark	Germany	Switzerland
11	Australia	Austria	Austria	Austria
12	Belgium	United States	Australia	Ireland
13	Canada	Finland	Czech Republic	Luxembourg
14	France	United Kingdom	Hungary	Canada
15	United Kingdom	Korea	Belgium	Czech Republic
16	Czech Republic	New Zealand	Poland	United Kingdom
17	Korea	Iceland	Ireland	Australia
18	Iceland	Belgium	Spain	Germany

순위	지속가능성	시장경제-생산부문	국가-재정 부문	가정-복지 부문
19	Ireland	France	United Kingdom	Greece
20	United States	Czech Republic	France	Spain
21	Japan	Portugal	United States	Japan
22	Spain	Poland	Canada	United States
23	Poland	Ireland	Italy	Italy
24	Hungary	Italy	Portugal	Hungary
25	Portugal	Spain	Iceland	Poland
26	Italy	Hungary	Japan	Korea
27	Greece	Greece	Greece	Portugal

한국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생산 부문의 지속가능성 순위는 27개국 중 15위, 국가-재정 부문은 5위, 가정-복지 부문은 26위로 나타났다. 즉 국가-재정부문의 재정건전성은 현단계에서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시장경제-생산 부문은 중위권에 머물고 있고, 가정-복지 부문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국가-재정영역 건전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령화율이 OECD 국가들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연금제도가 아직 덜 성숙하여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등 복지부문에 대한 국가(공적부문)의 역할이 아직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정-복지 영역의 순위가 매우 낮은 것은 개개인이 누리는 복지와 체감하는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Ⅲ. 지속가능성 삼각 축에 기반한 OECD 복지국가의 유형화와 정책특성: 퍼지셋 이상형 분석

1. 분석방법: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삼각 축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은 첫째, 군집분석처럼 연구자의 판단으로 집단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배경하에 추출되어 이념형(ideal type)을 구성하는 분류기준에 의해 집합

의 수가 결정됨으로써 보다 이론적 근거하에 유형화 및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어떤 하나의 사례가 특정 이상형 집단에 속한다 혹은 속하지 않는다는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점수(membership score)로 나타낸다. 즉, 그 사례가 각각의 이상형에 얼마나 속하였는가를 점수로 제시해줌으로써, 그 사례가 가지는 각각의 이상형들의 소속 점수 크기의 비교를 통하여 가장 큰 소속점수를 보이는 이상형으로 그 사례가 속한 것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보다 엄정하게 그 사례의 특성과 해당 이상형에 속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혼합적 성격을 가지는 사례의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석이 가능하다(Ragin, 2000, 2008; Kvist, 1999; 최영준, 2009).

이념형 분석은 Ragin(2008)이 제공하는 fsQCA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첫째, 각 변수들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활용하여 이념형을 설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세가지 축인 경제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3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총 경우의 수는 8가지이며, 8개의 이념형(ideal type) 집합이 생성되게 된다(표 6).

표 6. 퍼지셋 이상형 분석 모형

구분			퍼지셋 이상형	설명
경제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ME	SF	HW	ME*SF*HW	경제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높은 유형
ME	SF	hw	ME*SF*hw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유형
ME	sf	HW	ME*sf*HW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유형
ME	sf	hw	ME*sf*hw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유형
me	SF	HW	me*SF*HW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낮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높은 유형
me	SF	hw	me*SF*hw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낮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은 유형
me	sf	HW	me*sf*HW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낮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높은 유형
me	sf	hw	me*sf*hw	경제적 지속가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

둘째, 프로그램에 내장된 calibration 함수를 활용하여 각 조사대상 지표를 상대적인 가치로 표준화하되, 언어적 경계(verbal labels)를 부여함으로써 질적 변수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Ragin(2008)이 제안한 방식에 기초하여 세 가지 전환점을 설정하였다. 해당 값이 완전한 멤버십을 갖는 정도(FI: fully in or full membership)는 95% 이상일 경우이며, 완전히 멤버십이 없는 정도(FO: fully out or full non-membership)는 5% 이하일 경우로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FI, FO)의 분기점(crossover point)에 해당하는 언어적 경계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표준화된 값은 설정한 이념형에 입각하여 퍼지멤버십 점수(fuzzy membership score)로 표현된다. 퍼지셋 소속점수는 부정의 원리(principle of negation)에 의해 산출된다. '부정의 원리'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변수 중 하나인 사회적 지속가능성(SS) 퍼지점수가 0.7이라면 낮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퍼지점수는 높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여집합, 즉 1-SS인 0.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유형 분류는 최소값의 원리(minimum principle) 및 최대값의 원리(maximum principle)에 의해 산출되고 해석된다. '최소값의 원리'는 각 유형분류의 기준 별로 산출된 퍼지점수 중 최소값이 해당 유형의 소속점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값의 원리'는 최종적으로 해당 국가의 유형은 8개 유형들에 대해 최소값 원리에 의해 산출된 소속점수를 고려하여, 8가지 유형 중 소속점수가 가장 큰 유형이 해당 국가의 유형이 된다(Kvist, 1999, 정의룡·양재진, 2012).

2. 분석결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OECD 복지국가의 유형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퍼지셋 이상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OECD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높은 ME*SF*HW 유형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가 속하였다. 주로 북유럽 국가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포함된 유형이다.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은 me*sf*hw 유형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폴란드가 속해있다. 남유럽 국가군에 폴란드가 포함된 유형이다. 한국은 독일, 호주와 함께 경제적,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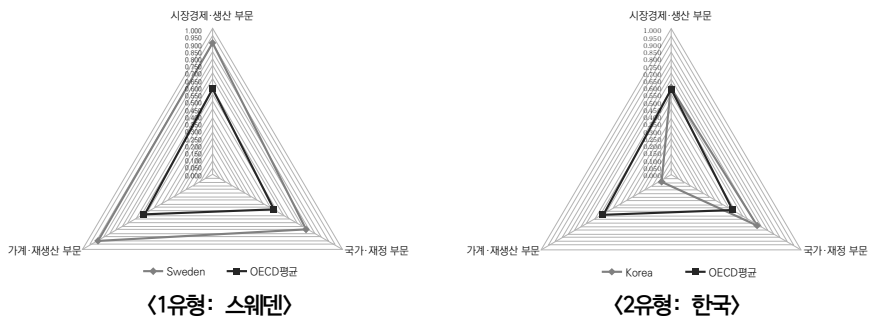
낮은 ME*SF*hw 유형에 속해 있다. 일본, 미국, 영국은 경제적 지속가능성만 높고,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ME*sf*hw 유형에 속해 있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벨기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만 높고, 경제적,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me*sf*HW 유형에 속해 있다. 뉴질랜드와 체코는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me*SF*HW 유형에 속하였다. 캐나다는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ME*sf*HW 유형이었고, 헝가리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지만,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낮은 me*SF*hw 유형이었다.

표 7.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 유형: 퍼지셋 이상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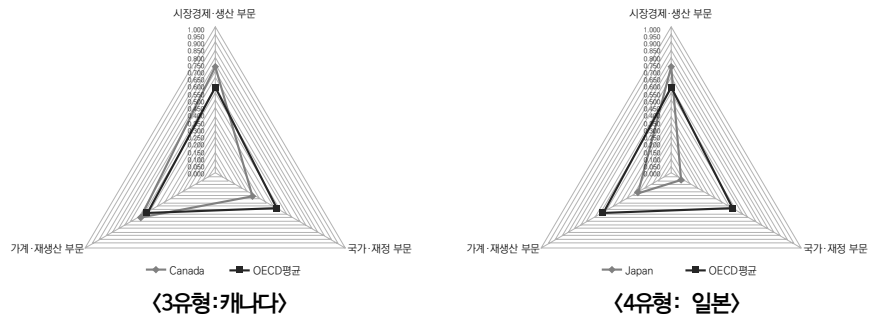
국가	유형	1	2	3	4	5	6	7	8	해당유형
		ME*SF*HW	ME*S F*hw	ME*s f*HW	ME*s f*hw	me*SF*HW	me*S F*hw	me*s f*HW	me*s f*hw	
Switzerland		0.768	0.443	0.232	0.232	0.261	0.261	0.232	0.232	ME*SF*HW
Norway		0.713	0.323	0.287	0.287	0.335	0.323	0.287	0.323	
Sweden		0.708	0.336	0.353	0.336	0.292	0.292	0.292	0.292	
Netherlands		0.608	0.392	0.431	0.392	0.390	0.390	0.390	0.392	
Denmark		0.585	0.317	0.383	0.317	0.415	0.317	0.383	0.317	
Austria		0.543	0.446	0.457	0.446	0.425	0.425	0.425	0.425	
Finland		0.541	0.361	0.439	0.361	0.459	0.361	0.439	0.361	
Luxembourg		0.529	0.471	0.398	0.398	0.271	0.271	0.271	0.271	
Germany		0.463	0.537	0.440	0.440	0.388	0.388	0.388	0.388	
Korea		0.292	0.520	0.292	0.382	0.292	0.480	0.292	0.382	
Australia		0.484	0.516	0.462	0.462	0.398	0.398	0.398	0.398	ME*sf*HW
Canada		0.394	0.394	0.520	0.480	0.394	0.394	0.402	0.402	
Japan		0.271	0.271	0.374	0.591	0.271	0.271	0.374	0.409	ME*sf*hw
United States		0.347	0.408	0.347	0.545	0.347	0.408	0.347	0.455	
United Kingdom		0.442	0.442	0.494	0.506	0.261	0.442	0.478	0.478	me*SF*HW
New Zealand		0.479	0.425	0.356	0.356	0.521	0.425	0.356	0.356	
Czech Republic		0.420	0.420	0.420	0.420	0.511	0.489	0.479	0.479	
Hungary		0.232	0.232	0.232	0.232	0.324	0.518	0.324	0.482	me*SF*hw
France		0.426	0.381	0.426	0.381	0.435	0.381	0.565	0.381	me*sf*HW
Iceland		0.274	0.274	0.476	0.350	0.274	0.274	0.524	0.350	
Ireland		0.350	0.350	0.350	0.350	0.477	0.451	0.523	0.451	
Belgium		0.439	0.388	0.439	0.388	0.489	0.388	0.511	0.388	
Italy		0.321	0.321	0.321	0.321	0.331	0.348	0.331	0.652	me*sf*hw
Portugal		0.280	0.334	0.280	0.413	0.280	0.334	0.280	0.587	
Greece		0.149	0.149	0.149	0.149	0.254	0.254	0.436	0.564	
Spain		0.295	0.295	0.295	0.295	0.425	0.466	0.425	0.534	
Poland		0.302	0.353	0.302	0.353	0.302	0.489	0.302	0.511	

<그림 2>는 지속가능성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 국가들의 지속가능성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복지국가 지속가능 유형별 대표 국가의 부문별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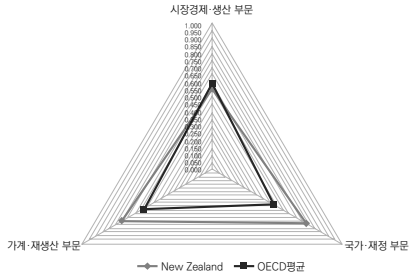


	시장경제-생산부문	국가-재정부문	가정-복지 부문	평균
OECD	0.586	0.480	0.541	0.536
Sweden	0.904(3위)	0.738(3위)	0.908(3위)	0.850(3위)
Korea	0.617(15위)	0.686(5위)	0.077(26위)	0.460(17위)



	시장경제-생산부문	국가-재정부문	가정-복지 부문	평균
OECD	0.586	0.480	0.541	0.536
Canada	0.736(8위)	0.295(22위)	0.586(14위)	0.539(13위)
Japan	0.725(9위)	0.079(26위)	0.261(21위)	0.355(21위)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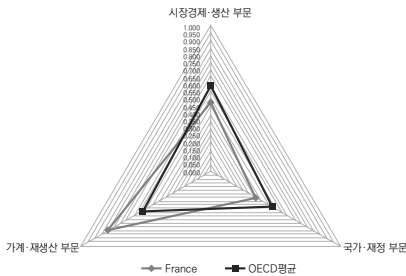


<5유형: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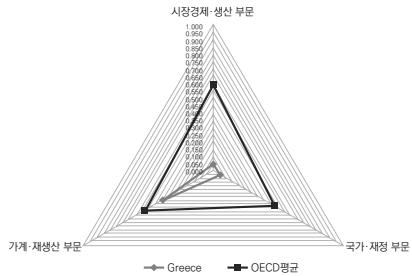


<6유형: 헝가리>

	시장경제-생산부문	국가-재정부문	가정-복지 부문	평균
OECD	0.586	0.480	0.541	0.536
New Zealand	0.555(16위)	0.732(4위)	0.710(9위)	0.665(8위)
Hungary	0.178(26위)	0.512(14위)	0.148(24위)	0.279(24위)



<7유형: 프랑스>



<8유형: 그리스>

	시장경제-생산부문	국가-재정부문	가정-복지 부문	평균
OECD	0.586	0.480	0.541	0.536
France	0.473(19위)	0.365(20위)	0.807(6위)	0.548(14위)
Greece	0.050(27위)	0.050(27위)	0.398(19위)	0.166(27위)

3. OECD 복지국가의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 특성

다차원적 지속가능성의 세가지 축에 따른 복지국가 지속가능 유형별로 복지정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속가능성의 세가지 축은 복지측면만을 고려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이 유형화하였던 복지레짐(welfare regime)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 유형별로 복지정책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지속가능성에서 복지 부문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해당하는 1/3에 불과하고, 복지 부문도 복지의 성과 및 체감복지 지표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특성이 지속가능성 유형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유형별로 복지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지속가능 유형별로 복지정책의 특정한 결합이 관찰되는 부분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8개 유형별이 아니더라도 지속가능성의 세가지 축의 특성과 복지정책 간 결합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지출규모와 지속가능성 특성 간의 결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총사회지출수준은 더 높았지만, 총사회지출 대비 공적지출수준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총사회지출은 더 높지만, 사적지출수준이 더 높고, 공적지출비율은 더 낮았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총사회지출수준은 더 낮았지만, 공적지출비율은 더 높았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총사회지출수준은 더 높았으며, 공적지출비율도 더 높았다. 즉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총사회지출수준은 더 높았던 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공적지출비율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정의 결합 관계를 보였다.

사회투자지출과 지속가능성 특성 간의 결합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사회투자지출이 약간 높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사회투자지출이 높았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사회투자지출이 높았다. 사회투자지출과 전통적 소득이전지출을 합한 지출 중 사회투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모두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에 비해 높았다. 즉 사회투자지출이 높은 것과 사회투자지출 비율이 높은 것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측면에서 모두 일관되게 정의 결합 관계에 놓여 있었다.³⁾

현물급여지출과 지속가능성 특성 간의 결합을 살펴보면,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높은 경우에 각각 낮은 경우에 비해 현물급여지출수준이 더 높았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합한 지출에서 현물급여가 차지하는 비율도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각각 낮은 경우에 비해 더 높았다. 이 역시 사회투자지출과 마찬가지로 현물급여지출수준 및 그 비율은 다차원적인 지속가능성과 정의 방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 유형별로는 북유럽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ME*SF*HW 유형, 대륙유럽 국가들이 포함된 me*sf*HW 유형, 미국, 영국, 일본이 포함된 ME*sf*hw 유형이 총사회지출이 높았으며, 동시에 ME*sf*hw 유형은 사적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투자지출 비율이 높은 복지국가 유형은 북유럽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ME*SF*HW 유형, 대륙유럽국가들이 포함된 me*sf*HW 유형, 헝가리가 포함된 me*SF*hw 유형이었다. 현물급여 비율이 높은 복지국가 유형도 역시 북유럽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ME*SF*HW 유형이었다. 반면 남유럽 국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me*sf*hw 유형은 총사회지출은 높은 편이지만, 사회투자지출이 낮고 현물급여지출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독일, 호주가 포함된 ME*SF*hw 유형은 총사회지출도 낮고, 사회투자지출도 낮으며, 현물급여지출도 낮은 특성을 보였다.

정리하면, 모델(2012)이 미래 복지국가 방향으로 언급한 사회투자복지국가의 성격을 포함한 유형들이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높은 북유럽국가군이 포함된 ME*SF*HW 유형이 가장 사회투자복지국가적 특성의 정책 성향을 보이고 있고, 세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은 남유럽국가군이 포함된 me*sf*hw 유형과 한국이 포함된 ME*SF*hw 유형은 사회투자복지국가적 특성의 정책 성향과 가장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러나 김교성(2008, 2010) 연구에 따르면, 사회투자정책의 소득분배 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고용률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아동 및 가족복지서비스 정책의 확대와 같은 사회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소득이전지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소득보장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모델 등(2012)은 사회투자국가가 아니라 사회투자복지국가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표 8. OECD 복지국가의 지속가능 유형과 복지정책 특성 간 결합관계

	국가	공적지출 대 사적지출				사회투자지출 대 전통적 소득이전지출			현금급여지출 대 현물급여지출			
		총 사회지출	공적 지출	사적 지출	공적 지출비율	사회투자 지출	전통적 소득이전 지출	사회투자 지출비율	현금급여 지출	현물급여 지출	현물급여 지출비율	
1	ME*SF*HW	Austria	30.3	29.1	1.2	96.0	9.4	15.1	38.4	19.2	1.7	8.1
		Denmark	32.9	30.2	2.7	91.8	13.0	10.5	55.4	14.0	6.9	33.0
		Finland	30.6	29.4	1.2	96.1	10.5	13.1	44.5	17.0	4.7	21.7
		Luxembourg	24.5	23.6	0.9	96.3	4.5	8.9	33.6	14.4	2.1	12.7
		Netherlands	29.2	23.2	6.0	79.5	8.2	7.4	52.7	11.4	2.7	19.1
		Norway	24.1	23.3	0.8	96.7	9.8	7.8	55.7	11.6	5.0	30.1
		Sweden	32.6	29.8	2.8	91.4	11.4	11.4	49.9	13.7	7.7	36.0
		Switzerland	19.5	18.4	1.1	94.4	7.1	7.0	50.3	10.3	1.7	14.2
	평균	28.0	25.9	2.1	92.8	9.2	10.2	47.6	14.0	4.1	21.9	
2	ME*SF*hw	Australia	20.6	17.8	2.8	86.4	7.6	5.6	57.5	8.0	3.3	29.2
		Germany	29.8	27.8	2.0	93.3	7.6	13.0	37.0	15.7	2.5	13.7
		Korea	11.1	9.6	1.5	86.6	6.3	2.7	69.6	3.4	1.5	30.8
	평균	20.5	18.4	2.1	88.8	7.2	7.1	54.7	9.0	2.4	24.6	
3	ME*sf*HW	Canada	24.3	19.2	5.1	79.0	6.2	5.5	52.9	10.0	0.9	8.3
		평균	24.3	19.2	5.1	79.0	6.2	5.5	52.9	10.0	0.9	8.3
4	ME*sf*hw	Japan	25.7	22.4	3.3	87.2	5.0	12.5	28.4	12.4	2.5	16.8
		United Kingdom	29.4	24.1	5.3	82.0	9.4	7.3	56.4	11.8	3.9	24.8
		United States	29.4	19.2	10.2	65.3	6.2	7.8	44.2	9.6	1.1	10.3
		평균	28.2	21.9	6.3	78.1	6.9	9.2	43.0	11.3	2.5	17.3
5	me*SF*HW	Czech Republic	20.9	20.7	0.2	99.0	6.2	9.5	39.6	12.7	1.1	8.0
		New Zealand	21.7	21.2	0.5	97.7	9.9	5.2	65.5	10.6	2.0	15.9
		평균	21.3	21.0	0.4	98.4	8.1	7.4	52.6	11.7	1.6	11.9
6	me*SF*hw	Hungary	24.1	23.9	0.2	99.2	8.9	11.4	43.9	15.7	2.7	14.7
		평균	24.1	23.9	0.2	99.2	8.9	11.4	43.9	15.7	2.7	14.7
7	me*sf*HW	France	34.9	32.1	2.8	92.0	10.0	15.6	39.0	18.9	3.2	14.5
		Iceland	23.1	18.5	4.6	80.1	11.3	3.9	74.4	7.7	4.6	37.4
		Ireland	25.8	23.6	2.2	91.5	11.0	8.2	57.2	13.8	1.8	11.5
		Belgium	32.0	29.7	2.3	92.8	10.6	13.9	43.3	18.1	2.1	10.4
		평균	29.0	26.0	3.0	89.1	10.7	10.4	53.5	14.6	2.9	18.5
8	me*sf*hw	Greece	25.7	23.9	1.8	93.0	1.6	13.8	10.4	15.7	1.5	8.7
		Italy	28.5	27.8	0.7	97.5	6.5	16.4	28.4	18.9	1.1	5.5
		Poland	21.5	21.5	0.0	100.0	6.7	12.1	35.7	15.2	0.5	3.2
		Portugal	27.2	25.6	1.6	94.1	7.8	13.6	36.5	16.9	0.7	4.0
		Spain	26.5	26.0	0.5	98.1	7.3	13.4	35.1	16.0	2.1	11.6
		평균	25.9	25.0	0.9	96.6	6.0	13.9	29.2	16.5	1.2	6.6
OECD 전체평균		26.1	23.8	2.4	91.0	8.2	10.1	45.8	13.4	2.7	16.8	
ME		26.3	23.1	3.1	88.1	8.1	9.0	48.4	12.2	3.2	20.6	
me		25.4	24.1	1.4	94.7	7.9	11.2	42.4	14.7	1.9	12.3	
SF		25.1	23.4	1.7	93.2	8.6	9.2	49.5	12.7	3.3	20.5	
sf		27.2	24.1	3.1	88.7	7.7	11.1	41.7	14.2	2.0	12.8	
HW		27.1	24.8	2.3	91.6	9.3	9.5	50.2	13.6	3.2	18.7	
hw		25.0	22.5	2.5	90.2	6.7	10.8	40.3	13.3	2.0	14.4	

주: Nikolai, Rita(2009)의 분류에 따른 급여지출.

- 1) 사회투자지출은 적극적 노동시장지출, 가족지출, 교육 지출 포함.
- 2) 전통적 소득이전지출은 수동적 노동시장 지출,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지출 포함.
- 3) 현물급여에서 보건지출은 제외한 값임.

ME(경제적 지속가능성 높음), me(경제적 지속가능성 낮음); SF(재정적 지속가능성 높음), sf(재정적 지속가능성 낮음)

HW(사회적 지속가능성 높음), hw(사회적 지속가능성 낮음)

자료: OECD(2013). SOEX dataset 2013.

젠더정책 특성과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특성 간의 결합을 살펴보면, 모성휴가의 관대성은 지속가능성이 낮은 특성과 연결된다.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두 모성휴가의 관대성이 낮다. 모성휴가 자체는 여성친화적인 젠더인지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모성휴가만 관대한 경우는 보수적인 가족전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아 보육비율은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높다. 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낮은 경우 영아보육비율이 아주 약간 높다. 유아 보육비율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각각 낮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젠더 갭 지수는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높은 경우에 각각 낮은 경우에 비해 양호한 지수를 보인다. 즉 젠더갭 지수가 양호한 것과 지속가능성 지수는 정의 방향의 관계에 놓여 있다.

복지국가 유형별로는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ME*SF*HW 유형과 대륙유럽국가들이 포함된 me*sf*HW 유형은 모성휴가의 관대성은 낮고, 영유아 보육비율은 높고 젠더 갭 지수는 양호했다. 미국, 영국, 일본이 포함된 ME*sf*hw 유형은 모성휴가 관대성이 높고, 영유아 보육비율은 평균 수준인 반면, 젠더갭 지수는 낮았다. 남부 유럽 국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me*sf*hw 유형과 한국과 독일, 호주가 포함된 ME*SF*hw 유형은 모성휴가 관대성도 낮은 편이고, 영유아 보육비율도 낮고, 젠더갭 지수도 낮은 특성을 보였다.

종합하면, 젠더평등과 다차원적인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간에는 매우 정합적인 결합관계가 발견된다.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젠더갭 지수는 정의 결합관계를 보였다. 모성보호 관대성과 세차원의 지속가능성 간에는 각각 역의 결합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시설비율은 영아와 유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정의 결합관계를 보인다.

표 9. OECD 복지국가의 지속가능 유형과 젠더정책 특성 간 결합관계

	해당국가	돌봄 정책			젠더 갭 지수 (gender gap index)	
		모성휴가의 관대성(주단위)	영유아 보육 비율(%)			
			1-2세 영아	3-5세 유아		
1	ME*SF*HW	Austria	16.0	12.1	77.6	0.7165
		Denmark	18.0	65.7	91.5	0.7778
		Finland	21.0	28.6	74.2	0.8383
		Luxembourg	16.0	38.6	85.9	0.7216
		Netherlands	16.0	55.9	67.1	0.747
		Norway	9.0	51.3	94.5	0.8404
		Sweden	16.0	46.7	91.1	0.8044
		Switzerland	14.0	-	47.5	0.7627
		평균	15.8	42.7	78.7	0.7761
2	ME*SF*hw	Australia	18	29	54.6	0.7291
		Germany	14.0	17.8	92.7	0.759
		Korea	12.8	37.7	79.8	0.6281
		평균	14.9	28.2	75.7	0.7054
3	ME*sf*HW	Canada	15.0	24.0	56.8	0.7407
		평균	15.0	24.0	56.8	0.7407
4	ME*sf*hw	Japan	14.0	28.3	90.0	0.6514
		United Kingdom	52.0	40.8	92.7	0.7462
		United States	12.0	31.4	55.7	0.7412
		평균	26.0	33.5	79.4	0.7129
5	me*SF*HW	Czech Republic	28.0	2.2	79.7	0.6789
		New Zealand	14.0	37.9	94.1	0.781
		평균	21.0	20.0	86.9	0.7300
6	me*SF*hw	Hungary	24.0	8.8	87.1	0.6642
		평균	24.0	8.8	87.1	0.6642
7	me*sf*HW	France	16.0	42.0	99.9	0.7018
		Iceland	13.0	55.0	95.9	0.853
		Ireland	26.0	30.8	56.4	0.783
		Belgium	15.0	48.4	99.4	0.7531
		평균	17.5	44.0	87.9	0.7727
8	me*sf*hw	Greece	17.0	15.7	46.6	0.6916
		Italy	20.0	29.2	97.4	0.6796
		Poland	24.0	7.9	47.3	0.7038
		Portugal	10.0	47.4	79.2	0.7144
		Spain	16.0	37.5	98.5	0.758
		평균	17.4	27.5	73.8	0.7095
OECD 평균		18.0	33.5	79.0	0.7395	
ME		17.6	36.3	76.8	0.7470	
me		18.9	28.6	80.2	0.7281	
SF		16.9	33.2	79.8	0.7464	
sf		19.2	33.7	78.1	0.7321	
HW		16.9	38.5	80.8	0.7667	
hw		19.5	27.6	76.8	0.7056	

주: gender gap index는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성취, 건강 및 수명, 정치적 권한 등의 측면에서 젠더 격차를 평가한 종합지수임. ME(경제적 지속가능성 높음), me(경제적 지속가능성 낮음); SF(재정적 지속가능성 높음), sf(재정적 지속가능성 낮음)

HW(사회적 지속가능성 높음), hw(사회적 지속가능성 낮음)

자료: OECD factbook 2013; World Economic Forum(2013).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3.

IV. 결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한국에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생산부문, 국가-재정부문, 가정-복지 부문에서 각각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호간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 개념의 지속가능성 지수 측정에 따르면, 스위스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 북유럽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분석대상 OECD 국가 27개국 중 17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문별 순위는 국가-재정 부문에서 5위, 시장경제-생산 부문에서 15위였고, 가정-복지 부문에서 26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즉, 한국은 현재로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좋고,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반면, 빈곤, 소득불평등, 빈곤, 인구재생산, 평균수명, 삶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최하위수준이다. 상대적빈곤율은 OECD 국가 중 26위이고, 지니계수 18위, 주관적 만족도 24위로 분배지표는 심각하게 좋지 않다. 게다가 한국은 출산율이 가장 최하위로 사회적 재생산에 위협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에 따른 멤버십 정도에 기반한 유형화 결과, 지속가능성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가 속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폴란드 등이 속하였다. 한국은 독일, 호주와 함께 국가-재정 부문 및 시장경제-생산 부문의 지속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낮은 유형에 속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 특성의 결합을 보면,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지출 수준이 높은 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그 반대였다. 사회지출 중 공적지출 비중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회투자적 지출 비율이 높고, 현물급여 지출비율이 높았다. 즉 세 차원에서의 높은 지속가능성과 사회투자복지국가적 특성 간의 정합적 결합이 발견되었다. 지속가능 유형별 젠더정책 특성 간 결합 관계를 보면, 세 차원의 높은 지속가능성과 젠더평등 간에 정합적 결합이 관찰되었다.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젠더 갭 지수가 양호하고, 모성휴가 관대성은 낮았다.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아 보육비율이 높고,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아 보육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적 특성과 결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적어도 남유럽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유럽은 세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에 속했다. 남유럽의 공적복지지출이 OECD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 조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김용하 외(2011b), 김연명(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남유럽은 복지지출의 혜택이 특권계층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혜택이 보편적으로 국민의 기초보장을 하는 곳에 사용되기 보다는 강력한 노동조합원, 공무원, 교사 등 특권계층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복지지출이 사용되고 있다. 국가에 의한 공적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이 특권계층의 계층적 지위유지 및 강화에 사용되고, 중하층 국민들에게는 덜 할당되어 높은 빈곤율과 높은 불평등도 등 국민복지의 성과는 매우 낮다(김용하 외, 2011a; 김연명, 2013).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지출의 구성에서도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전환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연금지출 등 경직적인 높은 현금지출이 주를 이루고, 젠더평등적인 가족정책서비스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 사회투자적 현물 서비스 급여는 매우 낮다. 즉 복지지출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복지지출의 구성이고, 복지지출의 최종적 수혜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세차원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낮은 남유럽 복지국가 유형은 복지지출의 구성과 복지지출의 귀착 측면에서 한국이 반면교사로 삼고 극복해야 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 변화가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제도자체의 지킴이 역할에 몰두하는 경우, 남유럽의 전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세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모두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는 좋은 복지모델임에 틀림없다. 미래 사회에 걸맞은 유연성을 갖추고, 복지지출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귀착도 보편적인 국민기초보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빈곤율, 불평등도의 측면에서 복지성과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젠더평등을 지원하고 높은 사회투자적인 지출 비중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선순환 결합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은 통합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체계 등 역사문화정치적 배경이 상이하여

한국사회가 무조건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선순환구조를 완성시키는 요소들의 기능을 잘 이해한다면 한국사회에 맞게 잘 변형하여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향후 급속한 고령화 및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분배체제에서 생산체제로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현재 단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경제생산체제보다는 분배체제로 무게중심을 옮겨 생산체제와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과제여야 할 것이다.

석재은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연금정책, 장기요양 등 돌봄정책, 복지국가 비교연구 등이며, 현재 양극화, 세대갈등, 돌봄윤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eokje@hallym.ac.kr)

참고문헌

- 김교성(2008). 사회투자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과. *사회복지정책*, 35, pp.29-59.
- 김교성, 김연명, 김송이, 황미경, 김성욱, 최영(2010).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신사회위험의 등장과 사회투자전략의 모색.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5, pp.31-54.
- 김용하, 임성은, 윤강재, 우선희(2011a). 지속가능한 복지모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하, 이태진, 강신욱, 노대명, 유근춘, 김성원 외(2011b).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선진복지국가 경험의 비교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명(2013).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특별호), pp.27-59.
- 신동면, 최영준(2012). 복지국가 트릴레마 양상의 변화: 퍼지셋이상형 분석의 적용. *한국 사회정책*, 19(3), pp.119-147.
- 에버린 후버, 존 스테프스(2002). 세계화, 경쟁력,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모델. *국가전략*, 8(1), pp.5-25.
- 정의룡, 양재진(2012).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한국정치학회보*, 46(1), pp.309-336.
- 하수정(2012). 지속가능성의 오남용. 연구보고서 6호. 한겨레경제연구소.
- 한국경제연구원 편(2011).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와 재정정책. 학술대회자료집(2011. 11.2). 한국경제연구원.
-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hankyung.com/dic/>.
- Bonoli, G. (2009). Varieties of social investment in labour market policy, In N. Morel, B. Palier, and J. Palme(eds.), *What Future for Social Investment?*,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pp.55-66
- Clasen, J. (2009). *Sustainable welfare and sustainable growth-towards a new social settlement in Germany and the UK?*. Anglo-German Foundation for the Study of Industrial Society.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Gallie, D., Hemerijck, A., and Myles, J.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010). *Progress and key challenges in the delivery of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s in Europe*. European Union.
- Glennerster, H. (2008). The sustainability of western welfare states. *LSE seminar paper*. <http://eprints.lse.ac.uk/3989/>.
- Gornick, J. C., Meyers, M. K. (2004). Welfare regimes in relation to paid work and care, In J. Zollinger, E. Holst(eds.), *Changing Life Patterns in Western Industrial Societies*, Netherlands: Elsevier Science Press, pp.45-67.
- Gough, I. (2001). Globalization and regional welfare regimes: The east asian case. *Global Social Policy*, 1(2), pp.163-189.
- Jessop, B. (1994). The transition to post-fordism and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In R. Burrows, B. Loader(eds.), *Towards a Post-Fordist Welfare State?*, Routledge, pp.13-37.
- Kvist, J. (2007). Exploring diversity: measuring welfare state change with fuzzy-set methodology. In J. Clasen, N. A. Siegel(eds.),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Edward Elgar, pp.198-214.
- Lee, H. K. (1999). Globalization and the emerging welfare state: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8(1), pp.23-37.
- Martin, R. (1996). Globalization and the west european welfare states: a critical review of recent debat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4), pp.305-327.
- Meier, V. and Werding, M. (2010). Ageing and the Welfare State: Securing Sustainability.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6(4), pp.655-673.
- Mishra, R. (1999).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Morel, N., Palier, B., and Palme, J. (2012). *Towards a Social Investment Welfare State?: Ideas, policies and challenges*. The Policy Press.
- Morgan, K. J. (2009). Child care and the social investment model: political conditions for reform, In N. Morel, B. Palier, and J. Palme(eds.), *What Future for Social Investment?*,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pp.44-53.
- Nikolai, R. (2009). Towards social investment patterns of public policy in OECD world, In N. Morel, B. Palier, and J. Palme(eds.), *What Future for Social Investment?*,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pp.99-117.
- OECD (2005). Is the Welfare System Sustainable? *OECD Economic Surveys*.
- Palme, J. (2009). The quest for sustainable social policies in the EU: the crisis and beyond. In N. Morel, B. Palier, and J. Palme(eds.), *What Future for Social Investment?*, Institute for Future Studies, pp.177-193.
- Ragin,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gin, C. (2007).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using fuzzy sets*.
- Ragin,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www.u.arizona.edu/~cragin/fsQCA/download/Chapter5_CCA.pdf.
- Taylor-Gooby, P. (2004). *Welfare State Reform and New Social Risks*. Oxford University Press.

Towards a Sustainable Welfare State: An Evaluation and Typology of OECD Countries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Seok, Jae Eun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i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i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Keywords: Sustainable Welfare State, Economic Sustainability, Financial Sustainability, Social Sustainability,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